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유해 발굴과 안장을 위한 건의

2009. 1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목 차

I. 제안 배경	1
II. 유해 발굴 및 안장 현황과 과제	3
1. 현황	3
2. 과제	4
가. 집단 희생지의 추가 발굴	4
나. 유해 안장시설 마련	5
III. 유해 발굴 및 안장에 관련된 제안	7
1. 특별법 제정	7
2. 유해 발굴사업 추진	7
IV. 결 론	8
■ 참고자료	
1. 타 기관 발굴 유해 보존 실태	10
2. 진실화해위원회 유해 발굴 현황	11
3. 진실규명활동 과정에서 밝혀진 유해 매장 추정지 ...	12
4. 발굴된 유해의 안장 현황	1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유해 발굴과 안장을 위한 건의

1. 제안 배경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은폐된 과거의 진실을 밝혀 과거와 화해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조사 결과, 많은 민간인들이 별다른 잘못도 없이 끌려가 산과 들, 바다 등지에서 집단으로 죽임을 당했다. 살아남은 유족들은 가족과 친척들의 시신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당시 당국은 그마저 못하게 하여 대부분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60여 년 간 계속되고 있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부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관련 증거 확인, 실체 규명,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해원을 위해 유해 발굴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건의 실체 규명과 유족의 해원 등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발굴한 유해는 전체 유해 매장 추정지에 묻혀 있는 유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현재 곳곳에 수많은 집단 매장 추정지가 방치되어 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가 발굴한 유해들은 임시로 보존되어 있을 뿐, 현재 유해 안치시설, 묘역 조성 등 장기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유해 발굴과 안장을 위한 건의 ●

적인 유해 안장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유해의 발굴과 안장은 희생자들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다. 가족을 잃은 유족의 상처와 고통이 국가적으로 인정되고 사회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진실규명에 따른 화해 조치의 일환으로 「유해 발굴과 안장을 위한 건의」를 드린다.

II. 유해 발굴 및 안장 현황과 과제

1. 현황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유해 매장 추정지 조사’ 용역을 실시, 유해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전국 168개 지역을 조사하여 유해 발굴이 가능한 59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59개 지역 중 유해 발굴 조사의 필요성, 발굴의 시급성, 집단매장 가능성 등을 고려, 순차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2007년부터 현재까지 3년째 유해를 발굴해 오고 있다. 2007년 ‘구례 봉성산 지역’을 시작으로 2007년에 4개소, 2008년에 5개소, 2009년에 4개소 등 총 13개소에서 유해를 발굴하여, 2009년 9월 1일 현재 1,583구의 유해와 4,887점의 유품을 수습하였다.

• 유해 발굴 장소 •

전남 구례 봉성산, 경북 경산 코발트 광산, 대전 동구 낭월동, 충북 청원 분터골 및 지경골, 전남 진도 갈매기섬, 경남 산청 원리 및 외공리, 전남 순천 매곡동, 충남 공주 상왕동 29-19, 전남 함평 해보면 광암리, 진주 문산읍 상문리 일대 등 10개 지역 13개소 (경산 코발트 광산지역 '07년 ~ '09년 3회, 청원 분터골 '07년, '08년 2회)

발굴된 유해의 대부분은 학살 당시 상태 그대로 땅 속에 묻혀 있었고 유해에서 집단 사살을 뒷받침하는 많은 총상흔들이 확인되었다. 또 당시 사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M1·칼빈 소총 등의 탄피와 탄두가 유해와 함께 발굴되었고, 희생자들의 것으로 보이는 단추, 신발, 도장, 안경, 숟가락, 비녀 등이 수습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발굴한 유해·유품을 통해 희생자의 신원, 연령 등을 비롯하여 학살 당시의 상황을 조사하였고, 조사가 끝난 유해 등은 2009년 3

월 충북대학교 내에 개관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에 임시로 안치되어 있다.

2008년 8월 진실화해위원회와 충북대학교는 ‘임시유해안장시설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해 2008년 8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3년간 발굴된 유해 등을 임시로 보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1년 7월 31일 이후 유해 안장 대책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전에 유족 등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유해(1995년 고양 금정굴에서 발굴한 유해, 2003년 마산 여양리에서 발굴한 유해 등)가 의과대학 실험실이나 컨테이너 등에 보관되어 이들 유해에 대한 안장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2. 과제

가. 집단 희생지의 추가 발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희생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희생자들의 유해가 그동안 발굴이나 보존 대책없이 방치되어 왔던 것이다.

지금까지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활동의 일환으로 유해를 발굴한 곳은 발굴 가능하다고 조사된 전체 지역의 1/3이 채 안되는 10개소에 불과하다. 경산 코발트 광산의 경우처럼 예산 및 사업기간 등의 사정으로 발굴을 중단하거나, 공주 지역처럼 발굴 과정에서 암매장지가 추가로 확인되었음에도 발굴을 계속하지 못하고 중단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유해 매장 추정지가 추가로 밝혀지고 있는 바, 2009년 9월 현재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파악한 민간인 집

단희생사건 희생자 유해 매장 추정지는 17개소에 달한다.

유해의 발굴은 유족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 등으로 매장 추정지가 갈수록 인멸되고 있어 그 발굴 수습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가는 서둘러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의 후속 과제로 한국전쟁시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을 계속해야 한다.

나. 유해 안장시설 마련

2009년까지 발굴한 1,583구의 유해는 충북대 내의 임시유해안치소에 보관하고 있다. 또 유족들이 발굴해 온 404구의 유해는 컨테이너 등에 보관하고 있다. 이 유해들은 임시방편적으로 보관하고 있을 뿐, 유해 안장시설 마련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희생된 희생자 유족들은 60년 넘게 가슴에 한을 안고 지내왔는데, 지금은 발굴된 유해마저 대학의 연구실이나 컨테이너 창고를 전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유해를 안장하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사과와 더불어 희생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첫걸음이며 화해·위령사업의 중심과제이다.

현재 국방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족이 확인된 전사자 유해는 국립묘지 등에 안장하고 있으며, 유가족 미확인 전사자 유해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해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다. 또한, 제주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발굴된 유해의 봉안을 위해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해 봉안소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비해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대학 연구실 등에 임시로 보관되어 있는 실정이다.

희생자들의 발굴된 유해는 추모공원 등 전국 단위의 묘역과 희생지 또는 지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유해 발굴과 안장을 위한 건의 •

방자치단체 단위로 묘역을 조성하여 봉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위령 시설도 추모 기념관 등 전국 단위의 시설을 설립하거나 혹은 지자체 별로 적절한 시설들을 실정에 맞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Ⅲ. 유해 발굴 및 안장에 관련된 제언

1. 특별법 제정

현재 유해 발굴에 관한 법으로는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924호)이 있다. 그러나 위 법은 그 적용 범위가 6·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의 발굴에 관한 것이어서 전사자가 아닌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희생자의 유해 발굴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관련된 유해의 조사·발굴·보존 등을 위해서는 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 특별법에는

- ① 한국전쟁 전후 시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희생된 민간인 유해 발굴
- ② 유해 발굴을 담당할 기관 또는 기구
- ③ 민간인 희생 또는 희생 추정 지역의 보존
- ④ 유해의 조사·발굴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의 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무연고 분묘에 대한 조사·발굴
- ⑤ 유해의 신원 확인 및 유해·유품의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유해 발굴사업 추진

진실규명에 따른 화해·위령사업의 추진과 유해 매장 추정지 보존 및 유해의 발굴과 안장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유해 발굴사업은 국방부, 보훈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가 담당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규정된 「과거사연구재단」이 설립될 경우는 재단이 유해 발굴과 안장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3년 간 진행된 유해 발굴사업을 통해 1,583구의 유해를 발굴하였다. 이러한 유해 발굴을 통해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 진실을 규명할 수 있었으며, 유족들에게는 60여 년 간 가족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던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해원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반세기 만에 국가가 나서 유해를 발굴함으로써 안으로 응어리져 있던 과거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유해 매장지가 방치돼 있으며, 발굴된 유해 또한 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대학 연구실 등에 임시로 보관되어 있는 실정이다. 억울한 희생자들에 대한 후손으로서의 도리를 위해서, 그리고 유가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유해 발굴 등은 장기적인 정부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유해 발굴 및 안장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과거의 불행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항구적인 근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곧 유해 발굴과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유해 발굴에 관한 특별법으로 유해 발굴사업과 안정적인 유해 안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시기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과 안장은 궁극적으로 국민통합과 화해를 이루기 위한 일이다. 우리 사회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데 불가결한 요건이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타 기관 발굴 유해 보존 실태

가. 6·25 전사자 발굴 유해 보존 실태

1) 발굴 현황

- 2008년 까지 2,885구의 유해 발굴 및 52,453점의 유품 수습

2) 아군 유해의 처리

- 신원 확인된 경우 : 유가족 인계/통보
- 신원 미확인 경우 : 국립 서울현충원 내 유해발굴 감식단 별도 납골당 봉안

3) 적군 유해의 처리

- 유엔사 경유 송환
- 송환 거부 시 파주 적군 묘지에 임시 매장

나. 제주 4·3 발굴 유해 보존 실태

1) 발굴 현황

(2009년 9월 1일 현재)

구분	대상 지역	유해 발굴 개체 수	비고
1단계	별도봉 일본군 진지동굴 등 제주시 화북동 일대 5개소	10	
2단계 1차	제주국제공항	100(추정)	예비검속 처형자
2단계 2차	제주국제공항	259	49년 군법회의 처형자
총 계		369	

2) 발굴 유해의 처리

- 2009년 현재 발굴 유해 처리와 관련한 예산 10억원 확보
- 「제주 4·3 사업소」가 중심이 되어 4·3 평화공원 내에 유해봉안소 설치 계획

2. 진실화해위원회 유해 발굴 현황

(2009년 9월 1일 현재)

년도	발굴지	관련 사건	신청건수	발굴 결과
2007 (4개소)	전남 구례 봉성산	구례지역 여순사건	12	• 유해 14개체 발굴 • 탄두(M1, 칼빈) 20개 및 단추 등 유품 46점 발굴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163	• 유해 107개체 발굴 • 도장, 단추, 허리띠 및 탄피 및 탄두 등 유품 231점 발굴
	대전 동구 낭월동	대전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110	• 유해 34개체 발굴 • 명찰, 신발, 단추, 탄피 및 탄두, 수갑 등 유품 456점 발굴
	충북 청원 분터골	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80	• 유해 118개체 발굴 • 명찰, 신발, 단추, 탄피 및 탄두(M1, 칼빈), 신발, 고무줄 등 유품 410점 발굴
2008 (5개소)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163	• 유해 216개체 발굴 • 신발, 고무줄, 버클, 탄피 및 탄두(M1, 칼빈), 76미리 고평탄 등 유품 296점 발굴
	충북 청원 분터골 및 지경골	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80	• 유해 218개체 발굴 • 탄두 및 탄피(M1, 칼빈, 45구경, 신발, 허리띠, 고무줄, 단추, 삐삐선 등 유품 541점 발굴
	전남 진도 갈매기섬	해남 국민보도연맹 사건	42	• 유해 19개체 발굴 • 탄피 및 탄두(M1, 칼빈, 45구경), 단추, 버클, 거울, 허리띠, 고무줄, 신발 등 유품 150점 발굴
	경남 산청 원리 및 외공리	경남 시천 삼장 민간인 희생사건·외공리 사건	24	• 유해 257개체 발굴 • 탄피 및 탄두(M1, 칼빈, 45구경), 손가락, 단추, 신발끈, 고무줄, 열쇠, 주걱, 도장 등 유품 1,247점 발굴
	전남 순천 매곡동	순천지역 여순사건	5	• 유해 발굴되지 않음
2009 (4개소)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163	• 유해 약 20여 개체 발굴
	충남 공주시 상왕동 29-19	공주형무소 재소자 및 보도연맹 사건	30	• 유해 약 300여 개체 발굴 • 유품 600여점 발굴
	전남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불갑산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62	• 유해 160여 개체 발굴 • 유품 1,000여점 발굴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일대	진주형무소 재소자 및 국민보도연맹 사건	64	• 유해 120여 개체 발굴 • 유품 60여점 발굴
총 계				유해 1,583 개체 및 4,887점의 유품 발굴

3. 진실규명활동 과정에서 밝혀진 유해 매장 추정지

(2009년 9월 1일 현재)

매장 추정지	관련 사건	매장 형태	매장 추정 규모	신청 건수	매장지 소관	비고
경남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 43번지	거제지역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야산	89/310명 (유족/시민사회 주장)	22	사유지	△거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됨
경남 함양군 마천면 군자리 개구리봉	함양군 마천면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야산	62명 (목격자 증언)	1	사유지	△함양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됨
경남 진주시 명석면 일대	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국민보도연맹사건	야산	1,200명 (전체 희생규모 추정)	136	사유지	△명석면 관지리 산88-1번지 등
충남 당진군 일대	부역혐의사건	야산	470명(추정)	-	사유지	△송악면 한진리 야산 등
전북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군경토벌사건	야산	40여 명	7	사유지	
전북 군산시 군산대학	적대세력사건	동굴	확인 중	-	군산대학 소유	
충남 연기군 전동면 봉대리, 노정리 경계지점	국민보도연맹사건	야산 구릉	약 40명	-	사유지	연기지역 보도연맹원이 아닌 외지(천안이나 충북지역)의 보도연맹원으로 추정됨
안동시 녹전면 원천리 영장골	봉화군 국민보도연맹사건	도로변 골짜기	30~50명	-	사유지	
안동시 와룡면 태리 기름뫍고개	안동시 국민보도연맹 사건	도로변 야산		-	사유지	
안동시 한태재 청굴, 도독굴	안동시 국민보도연맹 사건	도로변 야산 계곡	수백명 이상	-	사유지	
의성군 비안면 짝두골	의성군 국민보도연맹사건	도로변 골짜기		-	사유지	
의성군 의성읍 중리 여시개	의성군 국민보도연맹사건	도로변 골짜기	수백명 이상	-	사유지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옥천나들	구례 국민보도연맹사건	야산	30명	4	사유지	현장 확인하였고, 현재 유족이 세운 표지판이 있음. 약 15명씩 2군데로 추정(거리는 약 20m)
경북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아작골	영천 국민보도연맹사건		120여 명	22	사유지	
경북 영천시 자양면 성곡리 벌바위	영천 국민보도연맹사건		50여 명	22	사유지	
경북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 산곡	영천 국민보도연맹사건		30여 명	22	사유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여방리 개남골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30여 명	22	사유지	

4. 발굴된 유해의 안장 현황

(2009년 9월 1일 현재)

발굴 대상지	발굴 년도	발굴 유해 개체 수	현재 보관 장소	발굴 기관
고양 금정굴	1995	157	서울대 의대 해부학교실	고양 금정굴 유족회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 인근 대원골	2005	80	코발트광산 인근 컨테이너	유족 / 영남대학교
경남 마산시 여양리	2003	167	경남대학교 내 박물관 컨테이너	유족 / 경남대학교
충북 청원 분터골 및 지경골	2007, 2008	336	충북대학교 내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추모관	진실화해위원회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	2007, 2008, 2009	373		
전남 구례 봉성산	2007	14		
대전 동구 낭월동	2007	34		
경남 산청군 원리 및 외공리	2008	257		
전남 진도군 갈매기섬	2008	19		
전남 함평군 해보면 일대	2009	160		
충남 공주시 상왕동 일대	2009	300		
경남 진주시 문산읍 일대	2009	120		
총 계		2,017		